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961
----------	------

제출연월일 : 2024. 8.

제출자 : 하남시장

1. 제안이유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시행 관련 노선 선정 및 조정,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 체결 및 운송수입금의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다. 신규 또는 폐업·휴업 노선과 관련하여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라.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마.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재정지원금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바. 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업 운영 등과 관련한 조사·감사 실시 근거 마련 및 책무위반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규정(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사. 공공관리제 중지·제외, 운송사업자의 안전 운행 준수 사항 및 공공관리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3. 제정안: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6. 예산수반 사항: 덧붙임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 기간: 2024. 5. 1.~2024. 5. 22.(21일간)

나. 의견 내용: 의견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의견 반영

1) 위원회 구성 시 성별 대표성 확보(안 제10조제3항)

2) 운송사업자가 시민 안전을 위하여 버스운전자 관리·교육 등을 통해 예방해야 할 법규 위반 사례에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함
(안 제20조제2항)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의견 없음

9. 참고사항: 해당 없음

10. 관련부서: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관리제”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버스 노선의 운행수준과 운행계통을 결정하거나, 이를 운행하는 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으로 구분한다.
2. “공공지원형”이란 시가 대상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와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시가 협약에 따른 대상 노선(이하 “협약 노선”이라 한다)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선입찰형”이란 시가 노선에 대해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송수입금”이란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수입으로서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보조금 등을 말한다.

5. “표준운송원가”란 운송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6. “성과이윤”이란 공공관리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버스운행 실적평가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가목 중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시내버스 운송사업과 나목의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적용한다.

제2장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제4조(재정지원 협약)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버스운송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와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노선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노선의 조정) ① 시장은 교통편의 증진과 노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는 버스운송사업의 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운송수입금 등 관리) ① 시장은 협약 노선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되, 노선 단위로 구분한 다음 해당 노선 운송사업자별로 합산 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협약 노선의 운송비용을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3장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

제7조(노선입찰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노선을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노선 사업을 폐업·휴업하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시장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또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운영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선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 현황, 지역교통여건과 버스이용수 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총비용 또는 최저보조금을 산정하여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운영체제 개선 등을 위한 신규노선에 대하여는 운행차종· 운행거리·사용연료 등을 참작한 운송원가를 예측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또는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신규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

계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노선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사업계획 평가, 제안가격 등을 참고하여 입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노선의 위탁) 시장은 노선입찰에 부치는 것이 어려운 노선에 대하여 차량 및 차고지 등 기반시설과 함께 해당 노선을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4장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

제9조(위원회 기능)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관리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관리제 노선 선정에 관한 사항
3.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4. 정산기준·방법 등 조정에 관한 사항
5. 운송수입금 관리·배분 정책에 관한 사항
6. 공공관리제 중지 및 제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통정책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시의회 의원

2. 운송사업자

3. 교통·법률·회계·노무 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공관리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장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제12조(표준운송원가 산정) ① 시장은 2년마다 회계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검증을 거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송원가 산정기준 및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변동되는 비용(직종별 임금인상률, 물가 상승률 또는 법·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비용을 포함한다)과 운송비용의 급격한 변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반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정한 표준운송원가를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도의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재무제표나 경영·회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표준운송원가 항목의 실제 지출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① 운송사업자는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입금 현황, 실제 지출액,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표준운송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내버스 운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정산 및 보고)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 중 실제 지출액에 따라 지급된 항목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지도·감독

제15조(운송사업자의 책무)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송사업자는 부당하게 재정지원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지 않을 것
2.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
3.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 조사, 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할 것

4. 운송사업자는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

5. 운송사업자는 원가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제16조(조사·감사)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 또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공관리제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조사·감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평가(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서비스의 품질과 버스운행 관련 제반사항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의 경우 성과이윤 차등 지급

2.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한정 면허 갱신 거절

나. 성과이윤 차등 지급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도의 서비스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운송사업자 책무 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5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재정지원금 감액 등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호에 따른 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또는 운송수입금 누락: 전액 환수 조치 후 협약 및 면허 기간 내 성과이윤 지급 대상에서 제외
2. 제15조제3호에 따른 자료의 보고 또는 제출 불이행: 성과이윤 총액의 100분의 5 감액
3. 제15조제3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의 불응: 성과이윤 총액의 100분의 10 감액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나 감액할 성과이윤이 없는 경우: 최근 3년간 연도별 성과이윤 총액 중 가장 큰 금액의 100분의 5(제2호) 또는 100분의 10(제3호) 감액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이윤 총액의 감액은 재정지원 시 감액 결정금액을 전부 또는 분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감액 규모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18조(공공관리제 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해 더 이상 공공관리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관리제를 중지할 수 있다.

1. 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운송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책무를 위반하는 경우
3. 운송사업자 등 공공관리제 시행 주체가 공공관리제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4. 법령의 개정으로 공공관리제의 운영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공공관리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이 공공관리제 시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지 예정일 1년 이전에 도에 보고한 후 운송사업자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지일부터 2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관리제 제외)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등 공공관리제의 운영질서를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운송사업자를 공공관리제의 시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제의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가 노선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당 노선에 대체 운송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관리제 제외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제의 시행대상에서 제외되는 운송사업자와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의 재참여 허용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20조(안전운행 방안) ① 운송사업자는 별표의 시 공공관리제 서비스 이행표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성희롱·성폭력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 시행 등 버스 운전자의 지속적 관리
2. 버스 이용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소매치기, 성희롱·성폭력 등 법규 위반행위와 같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용객의 행위에 대한 버스 운전자의 대응 교육
3. 버스 내·외부의 청결상태 유지
4. 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 마련과 유지관리
5. 버스 운전자가 운행과 관련한 각종 기기 조작에 능숙하도록 정기적인 교육 시행 및 각종 기기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조치
6. 압축천연가스(CNG) 용기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제21조(준용) ①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가 정한 공공관리제 지

침을 따를 수 있다.

제22조(업무위탁) 시장은 공공관리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또는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에 공공관리제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교통정책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팀장 직위·성명	대중교통팀장 김지한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김지한 (031-790-5236)

[별표]

하남시 버스 공공관리제 서비스 이행표준(제20조 관련)

“서비스 이행표준”이란 시민의 최소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버스 서비스 공급 목표를 말합니다.

하남시 버스 공공관리제 서비스 이행표준

시민에게 안전하고 빠르며 편리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남시 공공관리제 버스는 아래의 서비스 이행표준을 지키겠습니다.

1. 노선별 계획된 운행횟수의 95% 이상 준수
2. 배차간격 준수율 90% 이상 준수
3. 승객 안전을 위해 인사사고 “Zero” 목표
4. 정차(공공관리제 노선) 정류소에 버스정보 100% 제공
(BIT, 노선도, 시간표 등)

관계법령 발췌서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 2024. 5. 14.] [법률 제20296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50조(재정 지원)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①, ③ ~ ⑨ (생략)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대중교통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20173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底床)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4. 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운용
5. 알뜰교통카드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

3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시행 2023. 8. 4.]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210호, 2023. 8. 4., 일부개정]

제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3.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에 따른 수송시설이용증서 소지자에게 마을버스의 무료승차를 지원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③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보조하는 경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버스 운송원가는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여 산정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 5. 1.]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159호, 2023.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한정면허)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1. 버스수입금관리 등 버스운영체계의 개선
2. 버스노선체계의 정비
3.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

제5조(한정면허 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① 관할관청이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한정면허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유차고·운송부대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노선연고도(路線緣故度), 서비스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4조에 따라 한정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면허신청을 받아야 하며, 노선입찰방식으로 면허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또는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신규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④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면허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조금 필요금액 또는 총 운송비용, 경영능력, 운송실적 등을 고려해야 하며, 버스이용수요와 운행차종·운행거리·사용연료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총 운송비용을 예정가격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생략)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 운영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공공관리제 노선 운행계획

순서	업체명	노선 번호	기점 지역	종점 지역	인가 대수	왕복거리 (km)
1	경기상운	30-3	상산곡동	잠실	25	37.8
2	경기상운	30-5	하남BRT	잠실	19	32.4
3	경기상운	33	감일	위례	8	17.6
4	경기상운	35	감일	잠실	16	21.8
5	경기상운	36	위례	가락시장	7	9.2
6	경기상운	38	하남BRT	복정역	15	43.0
7	경기상운	81	하남BRT	고덕역	8	28.8
8	경기상운	87	하남BRT	수서역	17	47.2
9	경기상운	89	미사	오금역	7	40.1
10	경기상운	112-5	미사	아산병원	30	41.2

나. 추계결과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월 운행대수 (2024.1월)	월 교통수입 (2024.1월)	연간 운송원가	연간 교통수입	연간 운송수지	연간 소요예산	하남시 부담금 (70%)	경기도 부담금 (30%)
3,298	1,268	34,751	15,220	-19,531	19,531	13,672	5,859

※ 시내버스 대당 평균운송원가 878,086원 기준 산출

※ 경기도 버스정책과-5658(2024.03.25.)

※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 기존 운수업체 재정지원(2023년 기준 59.5억) 불요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소요액	-	6,504	13,008	19,531	19,531

※ 2025년 총 사업량의 33%, 2026년 66%, 2027년 100% 사업 추진

다. 재원조달방안: 2025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예산담당부서와 협의 필요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장(이학준)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세 출		0	6,504	13,008	19,531	19,531	58,574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시 주관)		0	6,504	13,008	19,531	19,531	58,574
재원 조달		0	6,504	13,008	19,531	19,531	58,574
의존 재원 (30%)	소 계	0	1,951	3,902	5,859	5,859	17,571
	보조금	0	1,951	3,902	5,859	5,859	17,571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70%)	소 계	0	4,553	9,106	13,672	13,672	41,003
	지방세	0	4,553	9,106	13,672	13,672	41,003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